

산업적 측면에서 본 교육①

한국 교육산업의 현주소

2009.6.23 | 김일영_새사연 정치사회연구센터장 | kiy@saesayon.org

목 차

1. 교육산업 불황기에도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
2. 이미 사적 산업의 특징이 커지고 있는 한국 교육산업
3. 교육산업의 고용비중도 사적 부문이 압도적
4. 불황기 가계 경제를 흔드는 교육비 지출
5. 교육산업의 공공성 회복 과제는 이미 절박한 수준



<http://saesayon.org>

공교육 담당자들인 교사들은 교육을 경제와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실에서 교육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볼 때 엄청난 규모의 종사자와 소비지출이 행해지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분야다.

시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봐도 우리나라 교육시장이 단지 공교육 시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공교육 시장의 규모를 넘어서는 거대한 사교육시장이 존재하고 있고 갈수록 팽창하고 있다. 해외 교육시장에 유학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면서 해외교육시장도 중요한 교육소비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고용의 측면에서도 교육산업은 160만 명에 가까운 고용인원이 흡수되어 있는 산업영역이다. 이는 우리 산업에서 초과잉 분야로 평가받고 있는 건설업 종사자 180만 명에 거의 육박하는 규모로서 단일 업종으로는 매우 큰 비중이다.

국민의 소비지출 비중 측면에서 봐도 마찬가지다. 우리 국민의 전체 지출 가운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1퍼센트로, 이는 일반적인 의식주 지출이나 교통, 통신비를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다. 우리나라 가계의 경제 부담 가운데 가장 큰 하중을 주는 것이 교육비 지출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은 경제, 산업과 독립된 별도의 영역이라는 세간의 상식과 달리 이미 우리 경제와 산업구조의 큰 축으로 성장해왔고 시장규모, 고용비중, 가계 소비지출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역으로 변화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교육은 이미 시장화·산업화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교육을 경제나 산업과 무관한 별개의 영역으로 접근하려 하는 한 우리 앞에 놓인 교육현실에 제대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산업적으로 접근하면 ‘시장주의 접근’이 되고 비경제적으로 접근하면 ‘공공적 접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진보적 접근, 보수적 접근 이전에 사실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 앞에 놓인 현실 그 자체를 사실적으로 파악한 뒤에 그에 대한 진보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이런 취지에서 새사연은 교육 문제를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통해 한국 교육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공공적 가치’에 맞게 개혁할 수 있는지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새사연의 이러한 시도가 교육을 ‘시장의 논리’로 풀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물론, 오히려 진정한 ‘공공성 회복’

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것을 밝힌다.

1. 교육산업, 불황기에도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한국경제도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마당에 여전히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분야가 있다. 바로 교육산업이다. 교육산업 생산은 지난 5월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3.3퍼센트나 늘었다. 1년 동안 무려 2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교육산업 종사자는 지난해에 비해 3만 7,000명이나 늘었다.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키고 있는 소비위축이 여전히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국민의 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쯤 되면 교육산업이 교육 그 자체는 물론이고 경제와 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현황을 산업적 시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절실하다.

교육서비스업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¹⁾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을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육서비스업은 2007년 현재 우리나라 GDP의 6.4퍼센트²⁾를 차지하며, 55조 5,544억 원³⁾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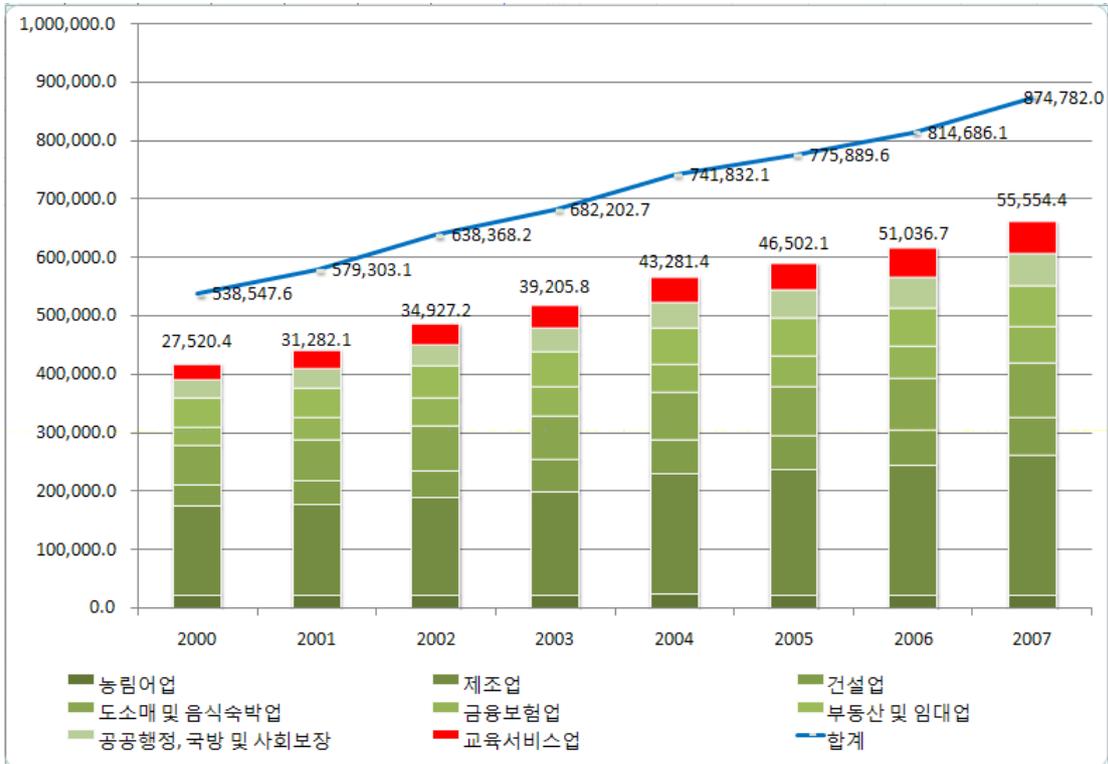
2000년 27조 5,000억 원이던 것이 7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전체 GDP의 성장보다도 빠른 것인데 그에 따라 2000년 일곱 번째에서 한 계단 올라서 여섯 번째로 큰 산업이 되었을 뿐 아니라, 농림어업보다도 2.2배나 커졌고 금융이나 부동산, 건설업 등과는 어깨를 견줄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외형만으로 놓고 보면 한국경제의 핵심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한해 동안 생산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다. 2008년 GDP는 1,023.9조원이다.
2) 여기서는 GDP 수치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총부가가치액으로 비중을 산정하였다. 총부가가치액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순생산물세(부가가치세, 간접세 등 세금)를 제(-)하고, 국가보조금을 더한(+) 것이다. 비중을 살펴보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고, 산업별로 국내총생산액 수치가 제시된 자료가 없어 대신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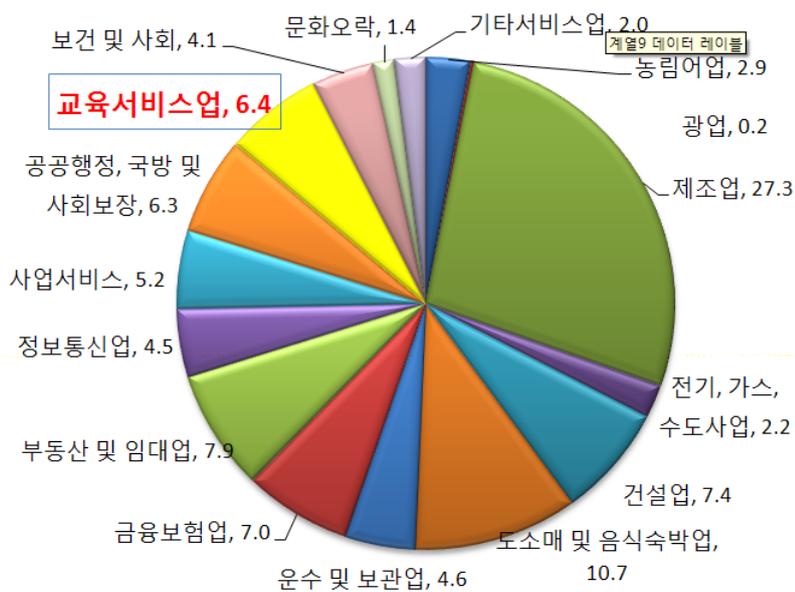
2007년 총부가가치 = GDP 975.0조원 - 순생산물세 100.2조원 = 874.8조원이다.

3) 명목가치 기준.

주요산업 부가가치와 국내총생산액 성장 추이
(한국은행, 단위 : 십억원)



2007년 총부가가치 중 교육서비스 비중
(한국은행, 단위 : %)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나라의 교육산업 비중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생산규모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소비지출 규모로 비교한 2005년 OECD 교육지표를 살펴보도록 하자. 사실 이 지표도 사교육 분야를 제외한 공교육비에 대한 비교일 뿐이다. <2008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공교육비 지출만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GDP 대비 7.4퍼센트로 이스라엘(8.5퍼센트)과 아이슬란드(8.0퍼센트)에 이어 3위이며 OECD 평균인 5.8퍼센트보다 1.4퍼센트p나 많다.

그런데 한국을 제외한 다른 OECD 국가들에서는 한국과 같은 사교육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실질적인 교육비 지출 규모를 공교육비 지출 비중 7.4퍼센트에 2퍼센트 규모의 사교육비 비중을 더한 9.4퍼센트로 계산하면 1위 이스라엘을 넘어서게 된다.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서 단정하기 어렵지만 한국이 경제 규모 대비 교육비 지출 규모가 가장 큰 나라일 개연성은 충분하다.

2. 이미 사적 산업의 특징이 커지고 있는 한국 교육산업

교육산업이 여타 산업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본원적으로 ‘공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산업 영역이 사적 기업들의 수익(영리)활동과 사적 소비지출에 의해 작동하는 것과 다르게, 교육산업은 일반적으로 공적 교육 기관들의 비영리 활동을 중심으로 공적 지출에 의해 운영된다. (결국 교육산업의 신자유주의화란 바로 공적인 교육 활동을 사적인 영리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서비스의 재원은 크게 정부, 비영리기관, 가계라는 세 부분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비영리기관의 규모가 매우 작아 비영리기관을 가계와 묶어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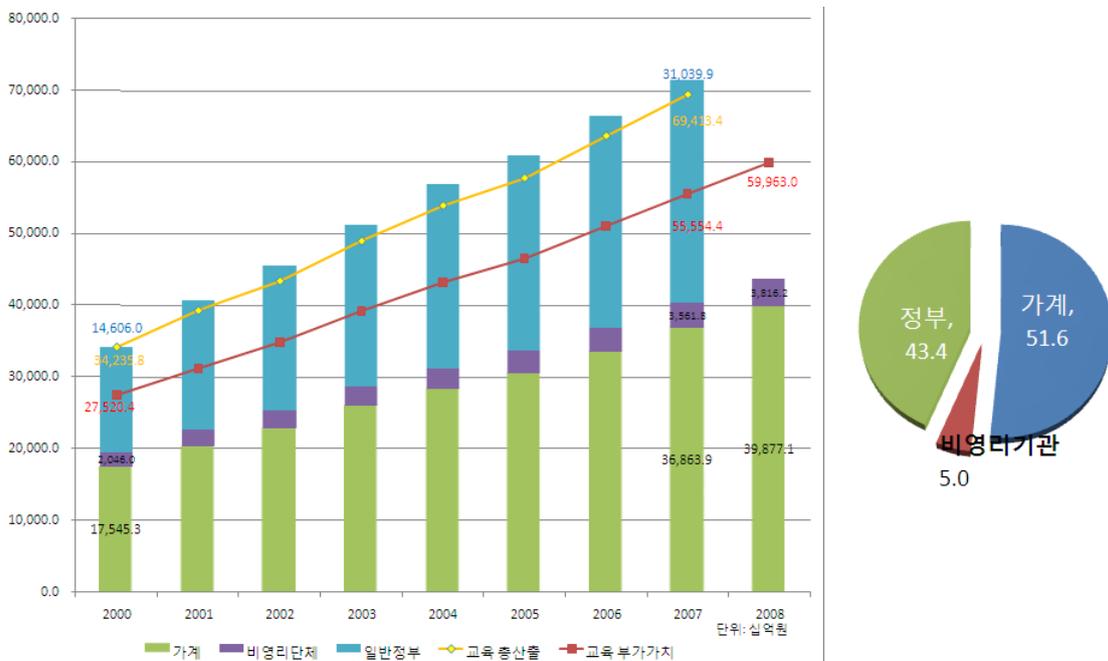
그런데 교육서비스의 재원규모는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가치인 부가가치로 계산하지 않고 각 재원부담 주체들의 총산출량 또는 지출량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세 가지 통계수치⁴⁾가 있다.

4) 세가지 유형이 있는 데, 첫 번째 국민계정의 <산출량 = 국내총부가가치 + 중간소비>의 방식이고, 두 번째는 OECD에서 제시하는 <가계 + 비영리단체 + 정부의 지출의 합>이며, 세 번째는 <총교육비 = 공교육비 + 사교육비>의 방식이다.

첫 번째는 가계와 비영리기관, 정부의 총지출량인데 이 규모는 약 71조 5,000억 원이다. 두 번째는 교육서비스의 총산출량으로 2007년 현재 약 69조 4,000억 원이며 세 번째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합계로서 76조 4,000억 원이다. 대략 70~76조 원 규모임을 알 수 있다.⁵⁾

총 지출을 다시 경제 주체별로 세분해 보면, 먼저 가계 지출은 36조 8,000억 원이고 비영리기관 지출은 3조 6,000억 원, 정부지출이 31조 원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43.4퍼센트이다. 전체 교육 지출에서 정부지출이 절반도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출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교육산업은 공적인 산업이 아니라 이미 사적인 산업으로 절반 이상 변화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문 산출량, 부가가치 및 주체별 자원부담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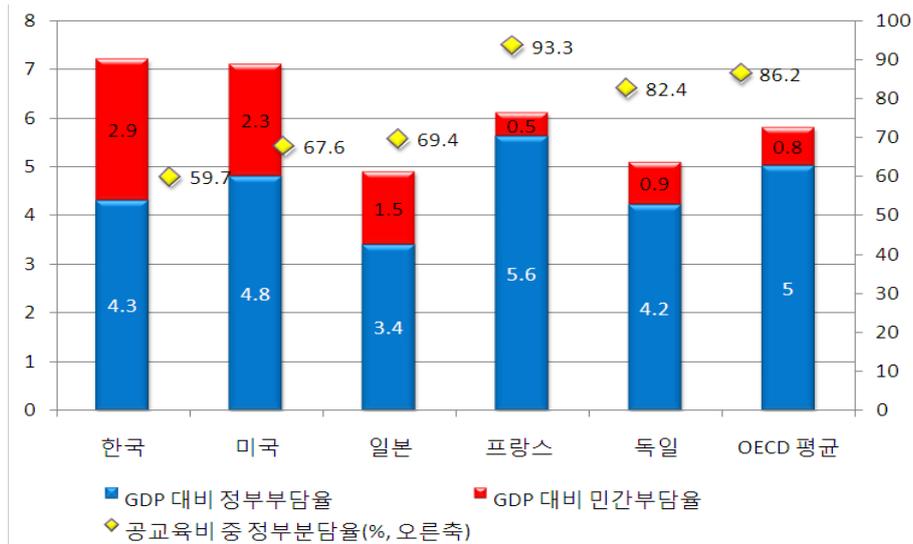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리나라 교육산업의 ‘사적 성격’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일까? 2008년 OECD가 발표한 2005년 기준 공교육비 중 정부와 민간(가계, 사립학교)의 부담률을 보면, 정부와 민간의 부담률을 나타내는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률’은 59.7퍼센트로 비교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5) 최대격차가 7조원에 이르지만, 앞에서 부가가치를 통해 국민경제에서의 규모비중을 살펴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원의 누가 더 얼마만큼이나 부담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다만 공교육비에 한정된 분담률이기 때문에 산출량으로 구분한 앞의 통계보다는 정부분담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공교육에서도 고등교육에서 정부의 부담률이 초중등교육의 79.1퍼센트에 비해 현저히 낮은 25퍼센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GDP 대비 정부, 민간 공교육비 부담률(OECD, 2005, 단위 :%, 재구성)



앞의 두 통계에서 보듯이 교육 서비스업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다른 통계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최근 통계를 내기 시작한 통계청의 자료를 아래 표와 같이 교육비를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정산할 경우, 교육비 규모가 앞의 두 통계치를 뛰어넘는 최대치를 보이지만 부담비율은 첫 번째 방식과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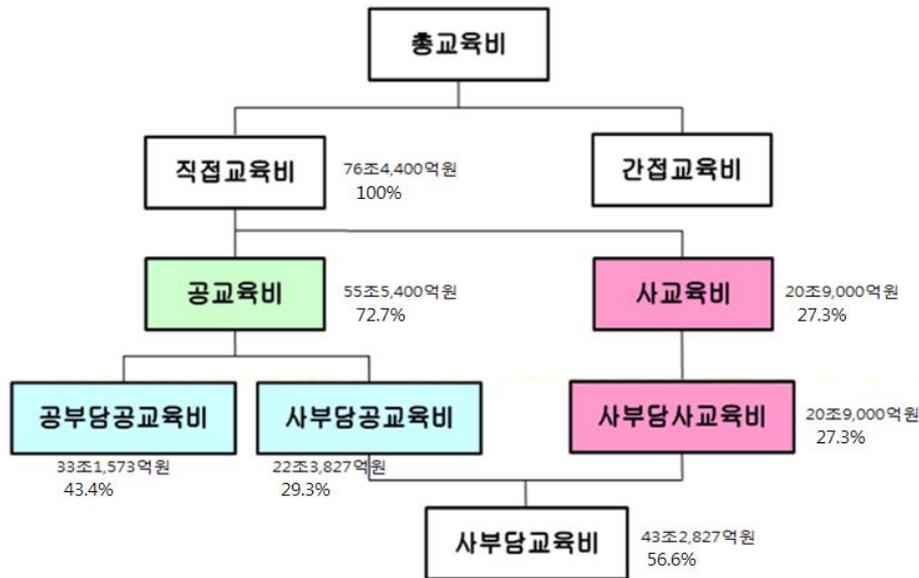
교육비 구성 분류표(김일혁 외, 2006, 재구성)

총교육비 : 교육활동을 위해 지출되거나 포기된 모든 형태의 교육비		간접교육비 : 교육활동을 함으로써 포기되는 모든 형태의 기회비용
직접교육비 : 정부, 학교법인, 기타 사회민간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		
공교육비 : 공적 예산회계 절차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	사교육비 : 학생, 학부모가 직접 지출하는 교육비	
공부담 공교육비 : 정부 재정 지원, 사학재단전입금, 민간단체 기부금 등	사부담 공교육비 : 공교육비 중 학생, 학부모가 부담하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사부담 사교육비 : 교재구입비, 학용품비, 단체활동비 등의 일반사교육비와 과외사교육비 등을 말함.	
사부담 교육비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경제규모 대비 최고수준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그 재정부담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 특히 가계가

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일반 국민들이 알아서 부담해야 할 몫이라는 뜻이다. 미국, 일본도 우리와 유사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가지고 있음에도 60퍼센트대 후반의 정부부담률을 보이고, 유럽의 경우는 80퍼센트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육비 규모(통계청, 2007, 재구성)



교육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은 1차적으로 공적 재원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무색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고등교육에 시장논리를 적용해 정부의 부담률이 지나치게 낮아진 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 다음으로 한국만의 특이현상이라 할 수 있는 사교육의 비대화가 두 번째 원인이다. 지나치게 커진 사교육비 비중으로 정부지출이 전체 교육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이 빈약한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익히 알고 있는 바대로 생애 전체에 대한 공교육 투자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교육산업의 고용비중도 사적 부문이 압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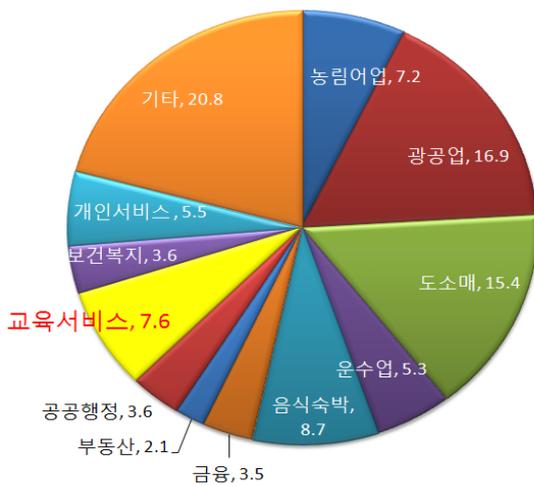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서비스업의 규모에서 주요한 한축은 종사자의 규모다. 2005년⁶⁾ 현재 교육서비스업의 종사자는 156만 8,000명으로 전체 취업

6) 고용에 대한 조사는 5년마다 시행하는 서비스총조사에 근거하였다. 사업체조사나 경제활

자의 6.9퍼센트에 이른다.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취업자 대비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고용 비중은 7.6퍼센트로 2년 사이 0.7퍼센트나 증가했다. 이는 광공업,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이어 4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농림어업인구보다도 많다. 13.2명당 1명꼴로 교육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증가세도 두드러지는데, 전체 취업자 증가율이 매년 1퍼센트대에 머물고 있음에도 교육서비스 종사자는 2퍼센트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23만 9,000명이 늘어났다. 4년간 전체 취업자수가 102만 명 늘어났으므로 4명 중 1명꼴로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한 셈이라 엄청난 고용창출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취업자 중 교육서비스 고용 비중
(한국은행, 단위 : %)



교육서비스 고용증가율 추이
(한국은행, 단위 : %)



그런데 교육산업을 고용의 측면에서 보아도 공적 부문의 비중보다 사적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사실은 금방 발견된다. 교육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원부담의 기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기관⁷⁾을 정부(국공립), 비영리기관, 사설기관(영리)으로 구분하여 분류⁸⁾해보자.

동인구조사는 교육서비스분야의 고용에 대한 적절한 자료가 없거나 과소추계되어 전체 고용 규모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에는 대분류의 고용 통계만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서비스업을 별도로 자료가 없다. 다만 교육서비스업의 고용비중만 발표하고 있다.

7) 사업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은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의 공공성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이나 교육의 경우 그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금융기관, 교육기관이라고 호칭한다.

8) 이러한 분류법에 의한 통계는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찾을 수가 없었다. 보육기관은 보육

통합적인 통계 자료가 없어서 여러 자료를 취합하였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사자 수는 서비스 총조사에 따른 종사자 수보다 약 34만 명⁹⁾ 정도 적다. 공교육분야의 통계는 비교적 정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차이는 대부분 사교육분야의 종사자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종사자는 전체 156만 명 가운데 43만여 명을 제외한 100만 명 이상이 비영리기관이나 사설기관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기관 성격에 따른 규모

구분	교육 기관수(개)			
	소계	국공립	비영리	사설
보육	33,499	1,826	1,458	30,215
초중,고등교육	11,707	9,556	2,871	*
평생교육	2,620	748	1,872	
사교육기관	94,375		*	94,375
합계	142,201	12,130	6,201	124,590

교육기관 성격에 따른 종사자 수

	교육 종사자수(명)			
	소계	국공립	비영리	사설
보육	191,103	17,853	16,572	156,678
초중,고등교육	571,920	398,379	170,788	*
평생교육	65,338	22,594	42,744	
사교육기관	399,244		*	399,244
합계	1,227,605	438,826	230,104	555,922

공교육 내에서도 초중등 교육은 국공립기관의 비율이 3분의 2를 넘지만 고등교육에서는 국공립기관의 비율은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교육서비스는 인적자원이 그 질을 상당부분 좌우하기 때문에 결국 기관수, 종사자수 뿐 아니라 교육의 내용적 측면도 민간부문이 좌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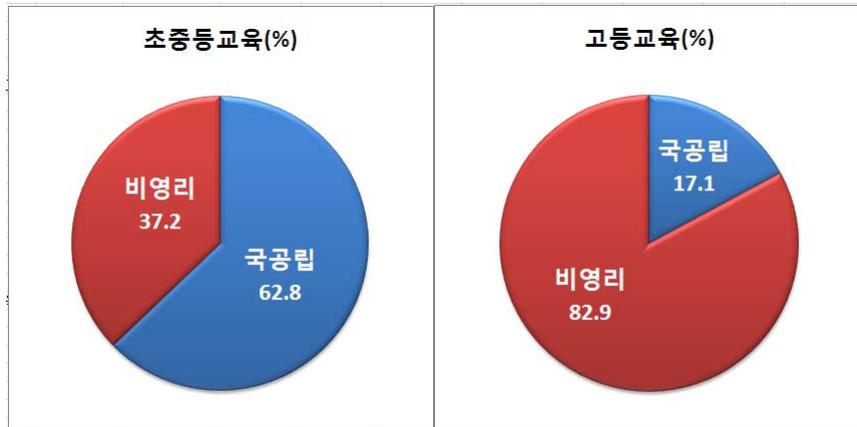
정부가 앞장서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개선을 하거나 산업적 측면에서 정책을 실행하려고 해도 실행과정에서 다양한 변수에 의해 변질될

통계시스템(2008)의 자료를, 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은 국가교육통계전문센터의 자료(2008)를,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통계정보시스템(2007), 그리고 사설기관은 서비스총조사의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교육기관 자료(2005)를 활용하였다.

9) 정부가 교육서비스업을 산업적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산업통계조사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않음은 문제다. 사교육에 대한 통계도 최근에서야 시행한 것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고용총규모는 2005년도이고 각 부문별 자료는 2007년 또는 2008년 자료이기 때문에 이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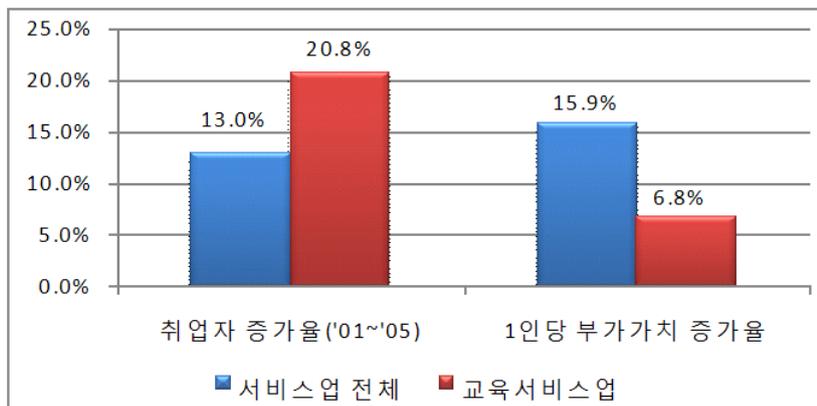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러한 제공기관과 종사자의 구성이 민간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까닭이다.

공교육기관 구성 비율(국공립, 비영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OECD 평균보다, 고용 비중에 비추어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비스의 낮은 생산성은 보몰의 주장처럼 서비스의 내재적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황수경(2008)은 EU 15개국의 예를 거론하며 고용비중(69.4퍼센트)보다 부가가치 비중(72.0퍼센트)이 더 높을 수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¹⁰⁾

그림 14 교육서비스업의 고용과 생산성 변화('01~'05)



그래서 서비스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는데, 교육 서비스업은 ‘고용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생산성 증가는 평균이하인 유형’에 속한다. 즉 ‘고(高)고용, 저(低)생산성’ 유형이라는 얘기다. 고용증가와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의 추이를 통해 교육서비스의 생산성을 확인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서비스업 전체와는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10) 전자의 보몰의 주장을 ‘구조적 부담’가설, 후자를 ‘고부가가치와’ 가설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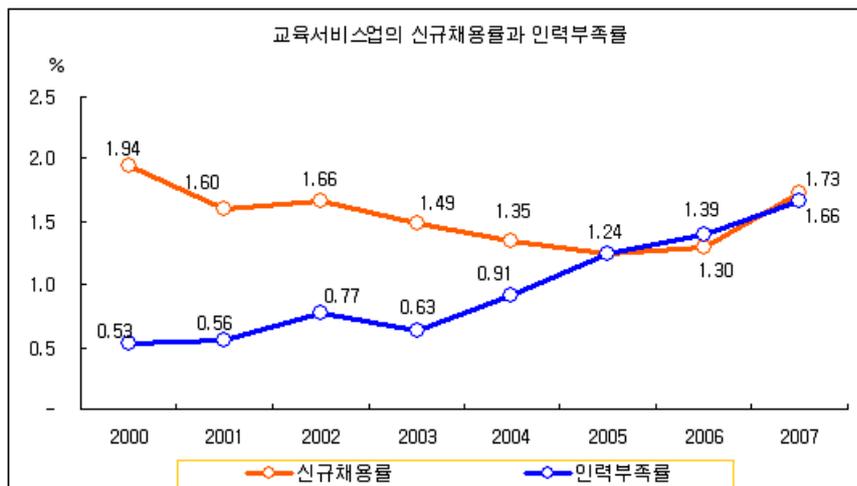
인건비와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온 외환위기 이후의 고용관행은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2006년 기준, 교육분야 공공부문 일자리의 총 21.3퍼센트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는데, 규모가 11만 2,393명에 달했다. 또한 교육서비스업에서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와의 임금격차¹¹⁾가 큰 것도 문제다. 상용직의 월평균 급여가 318만 2,000원인데 반해, 임시·일용직은 71만 6,000원에 불과하다. 자그마치 4.4배의 차이가 난다.

교육서비스업의 신규채용률과 인력부족률(산업연구원,2008)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신규채용률	1.94	1.60	1.66	1.49	1.35	1.24	1.30	1.73
인력부족률	0.53	0.56	0.77	0.63	0.91	1.24	1.39	1.66

자료: ISTAN(원출처: 노동부)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에서는 파트타임 고용 등 저임금 고용행태를 선호하면서 교육서비스 종사자들의 자존감을 박탈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신규채용의 증가에도 인력부족률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서비스업과 비교할 때 박사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양이나 비중에서 월등히 높은 결과가 나왔다. 물론 전문대학졸업 이상의 인력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저임금, 불안정 고용 그리고 대학입시와 같은 왜곡된 수요에 근거한 입시위주 사교육이 인력수요를 이끌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규모를 키우고 생산성을 높인다고 해서 과연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11)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2009.6.15, 노동부)

4. 불황기 가계경제를 흔드는 교육비 지출

공교육에서 정부의 부담율이 낮고 비대하게 성장한 사교육으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우리 국민이 일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

전국 1인 이상 가구¹²⁾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21만 8,000원으로 소비지출의 11.0퍼센트를 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지출은 식비,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항목이다. 먹고 움직이는 것을 제외하면 공부하는 데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은 교통통신비와 교육비다. 교통통신비는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라 공공요금의 인상과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것이고, 교육비는 우리사회의 교육열과 제도적 문제가 결합되어 증가해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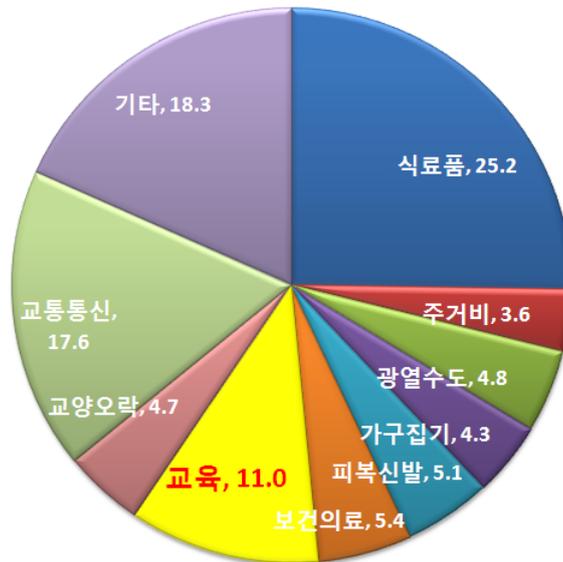
그러나 이 통계는 1인 이상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재학 중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로만 한정할 경우, 상당히 과소평가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취학가구원이 있는 가구들의 실제부담은 그보다 높는데, 취학가구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도시근로자 4인 가구의 교육지출액은 42만 3,300원이다. 그 중 사교육비에 해당하는 보충교육비가 27만 2,900원으로 절반이 넘고 있다. 특히 가구주의 연령이 40~49세인 경우 교육비 지출이 51만 4,300원, 그 중 보충교육비는 31만 1,300원이다. 실제 취학가구원이 있는 가계의 교육비 지출 규모는 전국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통계치보다 두 배 정도 많다고 봐야 한다.

소득에 따라 그 격차도 심해서 하위 1분위(10분위 중)는 가계소비의 단지 1.9퍼센트만 지출한 데 비해, 상위 8~10분위 계층은 12퍼센트를 모두 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50만 원 이상을 교육에 지출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소득이 월 6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가장이 월 500만 원 이상의 평균소득이 있는 직업은 관리자, 고위직 임원 등에 국

12)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비지출에서 교육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현재 월평균 25만 6,400원이고, 전체 가계지출의 12.0%를 점하고 있다.

한된다. 이런 직업이나, 소득을 가지지 못한 부모들은 자식교육도 남들처럼 못시킨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2007년 가계 소비지출 중 교육비 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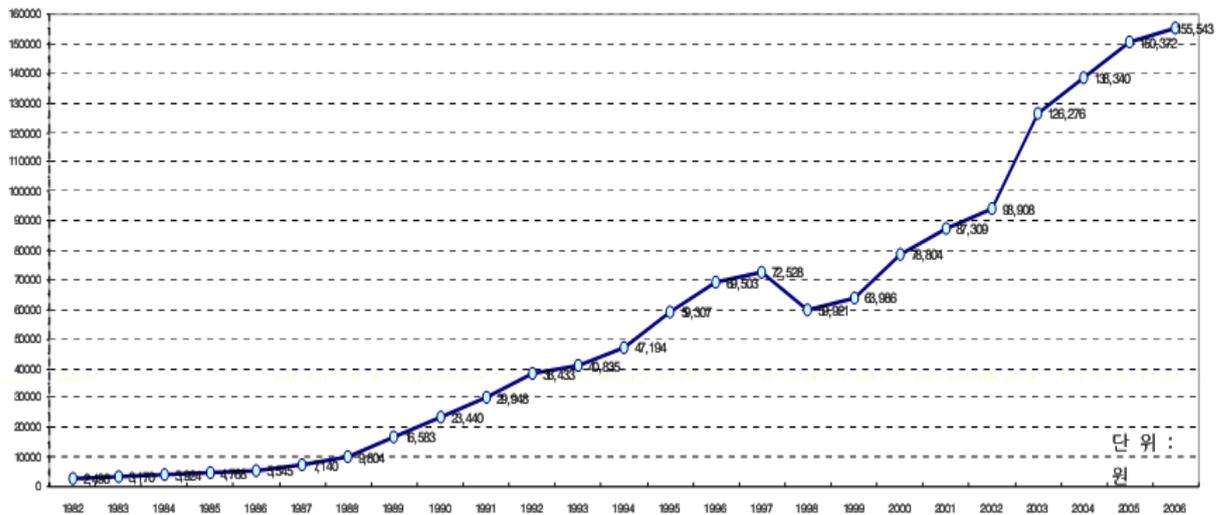
그러나 이런 액수도 평균적인 수치일 뿐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마음을 다 담았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최근 노컷뉴스(등골 휘는 온라인 과외 학파라치 단속 ‘글쎄요’, 2009.6.15)의 보도에 따르면, ‘기초·심화·문제풀이 등을 함께 묶은 패키지 상품은 수강료가 한 과목당 30만 원 안팎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교재비까지 추가하면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학원 강의가 아니다. 인기 있는 온라인 강의를 이 정도로 비싼 형편이니 온라인 강좌 서너 개 수강하는 것만으로도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셈이다.

소득의 최상위와 최하위가 보통 과소표집 되기 때문에 교육지출에서 고소득층의 높은 소비력은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다. 아주 소득이 낮은 계층은 물론 사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서민들은 높은 소득계층의 교육비 지출을 쫓아가느라 가량이 찢어지고,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도 교육비 과다지출로 전전긍긍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수행한 가계의 소비구조에 대한 연구(전승훈, 신영임 ; 2009)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소비항목 중 소득불평등이나 소비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지출이다. 교육비 지출이 1만 원 증가할 때 마다 1만 5,290원의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단순히 가계

소비의 지출비중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 빈부격차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이러한 불평등은 미래의 소득격차, 직업 등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가계조사 도시가구 보충교육비 증가 추이(김일혁 외, 2006)



5. 교육산업의 공공성회복 과제는 이미 절박한 수준

지금까지 산업적 측면에서 한국의 교육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교육은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산출량과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이 되었다.

둘째, 교육의 공공적 성격에 비해 교육재정, 교육기관, 종사자 구성에서 국공립보다 비영리기관이나 사설기관의 비중이 월등히 앞서고 있다.

셋째, 비대한 규모를 낳은 핵심적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사교육 시장의 존재 때문이다. 지나친 경쟁구조로 인한 중복적인 투입이 재원규모, 기관수, 종사자 수 등 모든 면에서 3분의 1을 넘고 있다.

넷째,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뿐 아니라 불평등 정도를 높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미래로까지 연장되고 있다.

다섯째, 인적자원의 공급이라는 면에서 개인에게는 투입된 노력에 비해 이후 소득에서 효과적이지 않으며, 국민경제에서도 중간재적 성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비용이므로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의 활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향후 우리 교육, 또는 교육산업이 MB정부의 구상처럼 ‘교육 선진화’라는 이름 아래 더욱 시장화, 사적 산업화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교육의 사적 산업화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율을 떨어뜨리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켜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교육산업의 공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복원하려는 방향전환을 서둘러야 할 때다.



참고문헌

- <신성장동력 추진계획-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2009, 국무총리실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략 연구>, 2009,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2006, 김일혁 외, 한국교육개발원
-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2009, 전승훈, 신영임, 국회예산정책처
- 통계청, 한국은행, 교육인적자원부, 각종 통계자료